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5500 |
|----------|------|

발의연월일 : 2017. 2. 9.

발 의 자 : 민경욱 · 문진국 · 김정재
金成泰 · 이은권 · 송석준
송희경 · 엄용수 · 이양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따라, 같은 해 9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년후견 지원제도가 법률화되는 등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후견 지원사업이 도입되고 있음.

그러나 발달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치매환자의 경우에도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에는 성년후견제도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치매환자에 대한 후견인 선임 및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환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p><u>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u></p> <p><u>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u></p> <p><u>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u></p> <p><u>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u></p> <p><u>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 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u></p> <p><u>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u></p> |

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
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
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
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
께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
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 또
는 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
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
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
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
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